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87호 (2013-17) 발행일 : 2013. 04. 2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시장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특징으로 하는 이중화를 통하여 이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함. 이 격차가 만성화 되면 외부자는 빈곤·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함

외국사례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복지적 대응을 동시에 하는 국가들이 경제와 평등의 양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임. 사후적인 대응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더 큰 비용을 초래하며 그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도는 이 분야에서 앞선 덴마크와 비슷한데 노동시장 유연성의 성공적 기반인 복지적 대응(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준은 아주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계급적 대립을 가져오는 영미형의 형태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과 정치적 연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스칸디나비아 형태를 제외하면, 비록 이중화를 가져오지만 이중화의 형태가 비경직적이며 이중화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적 대응을 하는 독일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유근춘 연구위원

1.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를 보는 관점

-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를 봄에 있어 중요한 관점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포함하는 자유화 정책이 복지와 관련된 평등성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 가임
- 이와 관련 선진국의 정치경제의 변화 중 기존의 해석 틀로 설명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등장함
 - 스웨덴, 덴마크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심으로 자유화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등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본 글은 다음의 발간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유근춘, 윤진호, 권순미, 임완섭, 강지원(2012).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등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조정기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도 자유화에 따라 평등성과 관련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남

- 따라서 이들 외국사례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함

2.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점

-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결합은 기존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임. 이는 다음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함

○ 노동시장 유연성은 수요의 변화에 대해 노동력 투입의 수준과 시기를 조절하고, 임금수준을 생산성과 지불 능력에 따라 변화시키며,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업들 간에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다음의 요소를 가짐

-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해고와 채용을 통해 노동력을 수량적으로 조절
-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노동자 수는 유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증가 또는 변형을 통해 노동력 투입을 시간적으로 조절
- 기능적 유연성: 작업조직의 재편과 노동자 숙련의 향상을 통하여 기술과 소비자수요의 변화에 의한 생산의 변화에 대응
- 임금유연성: 개인적 및 집단적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시장에 의한 비용압력을 임금의 조정으로 대응

○ 안정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음

- 직장 안정성: 특정 사용자 하에서 특정 직무 유지의 확실성
- 고용 안정성: 지속적 취업의 확실성
- 소득 안정성: 취업 종료 시 소득보호
- 결합 안정성: 취업과 기타 개인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예, 가사와 육아)의 결합의 확실성

- 기존의 선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이론에서의 결정요인

○ 노동의 조직화된 힘의 정도가 빈곤이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임(권력자원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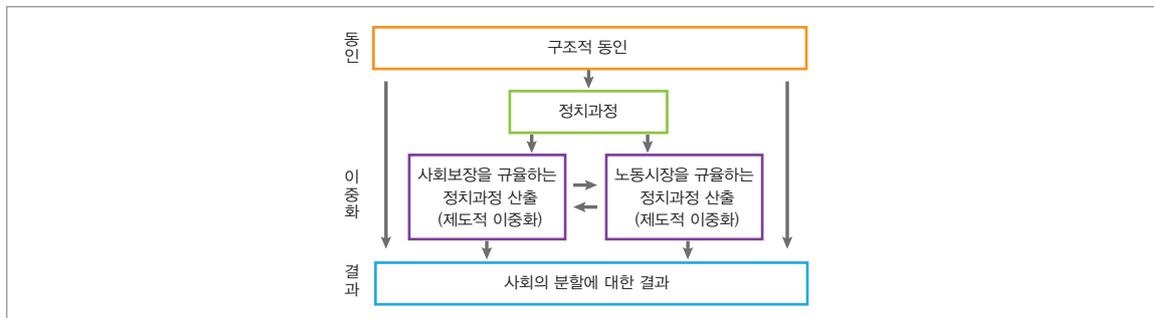
○ 세계화나 탈산업화의 경향에 의한 불평등화 등의 영향은 좌파정당의 힘에 의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권력자원이론)

○ 고용주의 경우 이론에 따라 상이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고용주는 가능하면 시장의 지배(유연성)를 늘리려함. 과거에 이런 이해를 정치적 제재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역사적 우연이었지만 현재는 세계화, 수반되는 조직된 노동계의 힘 약화,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등으로 이러한 조건이 변했음(자유주의이론)
- 고용주는 조정적 시장경제 안에서도 적응할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장기적 최적을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기를 배울 수 있음(자본주의 다양성이론)

- 고용주처럼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도 나눌 수 있음
 -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시장 외부자는 정책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이중 노동시장이론)
- 기독교민주당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중심의 대륙 국가들에서 이중화의 경향이 더 심할 수 있음(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이론)
- 노동과 고용 쪽이 조직화 되어 있는 체제일수록 국가수준의 협상이나 노동, 고용, 국가의 삼자협상이 발달되고, 그 결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경제와 평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옴(거시적 조합주의이론). 특히 국가의 능력이 강조됨
- 최근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이들의 공통점은 동일한 변동원인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다른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이에 따르면 정치적 대응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는 제도의 형태와 기능을 결정하는 정치적 연대 접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Thelen, 2012)
 - 이중화와 관련된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구조적 동인에 대해서도 정치과정에서 산출되는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제도결과에 따라 평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분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그림 1] 이중화를 설명하는 개념 틀에서 정치과정의 중심위치



출처: Emmenegger et al.(201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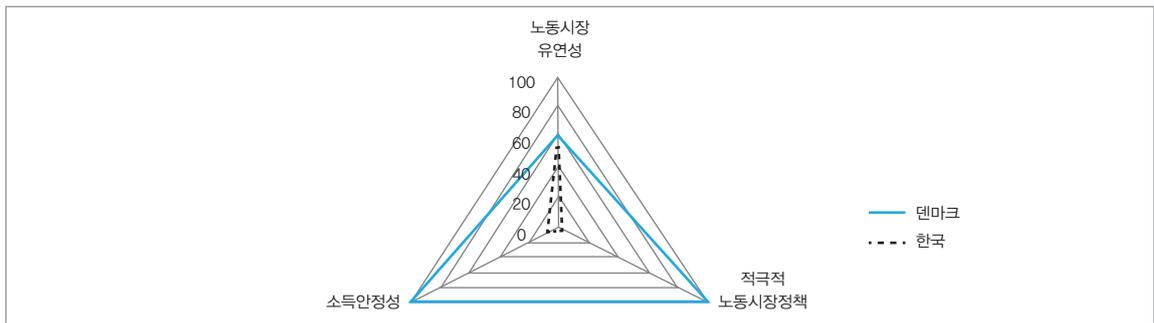
3. 외국사례 비교에 의한 주요 결과

■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진전되었는데 이에 대한 복지적 대응이 미약함

- 이는 덴마크와의 비교에서 찾아볼 수 있음.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에 비해 볼 때 한국은 유연성, 소득안정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면에서 얼마만한 상대적 위치에 있는지를 다음의 그림이 나타냄(윤진호 in 유근춘 외, 2012, 79-81)
 - 덴마크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안정성(관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균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준을 자랑(삼각형 면적이 가장 넓음)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연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황금삼각형 모델이라 불림)

-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의 성공적 기반이 되는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선진국 가운데 최저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삼각형의 면적이 매우 작음
- 이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발생은 물론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각 국가들의 국제비교에서 얻어지는 주요 결과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덴마크의 황금삼각형과 우리나라의 비교



■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서 성공한 국가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

○ 첫째로, 역사적으로 당연시 되는 결합을 벗어나 이질적일 수 있는 제도요소들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임

〈덴마크의 예〉

- 덴마크는 과거 주류경제학자들이 유럽의 관대한 복지국가와 이에 따른 높은 조세가 투자 저하와 저성장, 저실업을 가져오는 반면,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양호한 거시경제성과 고용창출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조세율과 복지국가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결국 양호한 경제성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 특정한 모델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서로 선순환적인 제도를 자신의 토양위에서 만들어내고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판단됨

〈네덜란드의 예〉

- 네덜란드도 코포라티즘적 정책결정의 복원을 통해 노동시장은 자유주의 국가만큼 유연하지만(노동시장의 유연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사민주의 국가들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노동시장 활성화)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 매우 보호적이면서도(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강화) 복지체제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으로 변하는 기존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조합을 가지고 노동시장과 복지의 새로운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경로형성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공통점은 노동자들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확실한 사회보장과 공격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됨

○둘째로, 이렇게 이전의 길과는 다를 수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길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한 국가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 선택되고 이를 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점임

- 즉 탈산업화나 세계화는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통적인 문제인 반면 이에 대한 대응방식은 결국 정치과정을 통한 의식적인 집단행위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결정된 제도는 각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쳐 각 국가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임. 각 국가의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의 수준이 각 국가정책의 성공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임

<네덜란드의 예>

-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바세나르협약으로 상징되는 노사정협력체제에 의한 임금억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교환, 유연안정성법으로 상징되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성공적 교환이라는 측면을 부각해 왔음
- 그러나 유연안정성모델이 정착하기까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노사정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때마다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관철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줌
- 이를 위해 국가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중시하고 적절히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결코 이에 종속되지는 않았음.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노조나 사용자집단의 저항에 부딪히면, 정부는 코포라티즘 기제를 우회한 여론의 동원, 임금과 사회보장급여의 연계제도 폐지, 의회조사 등을 통해 노사를 압박하였고, 결국 이들이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전략을 포기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었음
- 또한 정부는 자신이 수립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탁월한 프레이밍 능력을 발휘하였음. 이를 통해 거부권을 가진 이익집단을 회유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었음
- 이는 공적인 정치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정책을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프레이밍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개혁정치的主导권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셋째로,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각국마다 이전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기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임

- 그 결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노동시장과 복지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함. 성공한 국가들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잘 극복하고 공통의 성공적인 길을 모든 정치세력들이 상호존중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감

<스웨덴과 독일의 예>

- 2차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존재할 때 각국은 다르게 반응하였음
- 독일은 외국으로부터 이민노동자를 받아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스웨덴은 자국 내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였음
- 그 결과 스웨덴에는 여성의 노동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공적서비스가 발전하고, 노동운동에서도 기존의 제조산업과는 다른 여성과 서비스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음
- 이들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응하는 복지의 확대와 그를 위한 고부담이 정치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었고, 이는 좀 더 평등적인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였음
- 반면 독일은 제조산업의 노조와 고용주 사이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정치선택이 이루어져, 여성과 서비스산업이 덜 보호받는 덜 평등적인 이중화의 방향으로 나아갔음

〈일본의 예〉

- 일본의 경험은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줌
-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복지 계층화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형성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기여와 수급권을 철저히 연계시키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의 내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취약계층의 기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거나 기여와 수급권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처방이 없다면, 복지 양극화의 해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함
- 새로운 제도 형성의 가능성은 노동운동과 정치의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의 복지제도는 보수주의 복지체제,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체제 속에서 확대와 축소를 경험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복지제도 내에 포섭하려는 새로운 조정이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의 성격 및 권력행사 방식, 그리고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응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일본의 경험은 노동운동이 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배타적 이익을 옹호하기보다 사회연대전략을 추구하고, 이것이 친복지정당의 선거 경쟁력으로 뒷받침될 때, 공적 복지의 포괄적 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함

■ 다음으로 비성공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들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첫째로, 노동시장 유연성에 의해 사회가 이중화 되는 경향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음

- 만일 이중화 정도가 심할수록 비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임. 즉 이들 국가에서는 이중화가 크지 않음
- 반면에 이중화가 발생하는 국가들에서도 차이가 있음

〈독일의 예〉

- 독일은 제조업분야의 핵심인력에 대해 전통적인 보호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불안정한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함
- 그러나 이 두 부분 간의 이동을 막는 경직적 제도는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응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크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예〉

- 반면 일본은 노동운동이 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배타적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적 체제이며,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응도 미약함
- 따라서 같은 이중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도 이동이 비경직적이고,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응을 하는 독일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평등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음

○둘째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진행시킬 때 이로 인한 문제에 사회보장적으로 동시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크다는 것임

〈일본의 예〉

-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급속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보다 많은 위협과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것임

-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는 그 효과가 불확실할 뿐더러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그것이 설사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확보와 나란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이외에도 선진국의 국가비교를 통해 부각된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간의 관계를 논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음
 - 첫째로, 유연안정성 개념이 가진 모순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즉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더라도 과연 해고규제 완화라는 직장안정성의 저해가 실업급여 확대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에 의해 보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고 있어야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임
 - 둘째로, 다른 국가에서 성공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제도 간의 선순환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갈등과 양보의 결과이며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즉 나름대로의 하부구조를 가짐) 이의 이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과 공적인 정치과정에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셋째로, 비록 성공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유연안정성 모델의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덴마크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와 노동시장 성과가 유연안정성 모델 만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4. 결론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덴마크와 같은 정도로 진전된 상황과 사회보장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의 일본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단 방향은 무엇보다도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임
- 다음으로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사회보장적인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존의 국가 비교를 통한다면 어느 방향이 될까를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의 형태를 Thelen(2012)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됨
 - 첫째로, 규제가 거의 없는 영미형의 형태,
 - 둘째로 북구형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에 대해 규제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셋째로 북구형에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에 대한 규제가 있는 스웨덴,
 - 넷째로 대륙형의 독일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지만 두 부분 사이에 실제에 대응하는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이중구조 국가,
 - 다섯째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중구조가 있으면서 이 이중구조가 경직적이어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임

-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형태와 함께 이에 대한 복지의 대응도 차이가 남
 - 첫째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영미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시스템의 대응체계가 미약함. 이 경우 계급투쟁적인 사회적 이중성이 존재하여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됨
 - 둘째와 셋째의 북구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복지시스템이 대폭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음. 그 결과 사회의 통합도 높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은 우수한 결과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과 정치적 세력이 있는가를 고려할 때 당장의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됨
 - 넷째의 독일의 경우는 노동자의 역량에 따라 제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보호의 정도가 낮은 유연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이 경우 특징은 이중화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유연성 상태의 이동이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에서 탈락하여 보호를 덜 받는 비핵심인력으로 된 경우에는 기초보장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복지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임
 - 이에 비해 다섯째의 한국과 일본은 노동시장에서의 보호가 노동자의 역량에 비례하기 보다는 노조와 기업의 담합에 의한 내부자 보호의 경향 등에 의해 경직적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형태와 이에 대한 복지시스템의 대응형태는 우리나라가 경직적인 이중구조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는 독일과 같이 유연한 이중구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 이에 대한 복지시스템의 대응은 덜 보호 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복지제도나 기초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 생각됨
 - 이때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집필자 | 유근춘(미래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의 | 02-380-8155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